현안리포트 05-

미국의 對中 통상 압력과 중국의 대응 ; 동향 및 전망

2005.6

kotra 해외조사팀

요 약

부시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확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의회·업계의 불만과 압력에도 강력한 대중무역 조치는 억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4년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2005년에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미 통상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재무부가 10월까지 위앤화 절상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China Trade Act Bill, China Currency Act)들이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양국 통상분쟁의 최전방인 섬유시장에서 미국이 4월 이후 7개 중국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6월 중 5개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비해 더욱 강력한 반덤핑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중국이 6월 1일부로 78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는 전쟁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증치세 환급율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수출제품 예비경보체제 적용 등 전반적 시장질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전세계 최대 반덤핑 피소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통상공세가 수출 뿐 아니라 시장개방, 환율시스템 변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노력 강화, 법규 제정 등의 제도적 대응기반 구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분쟁의 경우 중국은 완만한 경기 연착륙을 위해 일정 폭의 수출증가세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어 적절한 수준의 타협안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과당경쟁과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섬

유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수출가 인상을 용인할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 위앤화 절상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과열의 진정 여부와 핫머니 동향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대중 경고 및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과 관련, 의회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과연 미국경제의 문제의 주범이 중국인가에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급격한 위앤화 재조정은 오히려 미국과 세계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복수통화바스켓 연동 등 중간단계 조치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입규제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성장의 숨통을 죄는 극단적인 조치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적인 대중 수입규제 강화나 위앤화 환율조정으로는 호불호를 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지 진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미국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내수와 수출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며 통상마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급 브랜드 육성이 최대 과제이다.

목 차

Ⅰ.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 동향 및 전망 /1

1.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 동향 /1
   가. 정부 및 의회의 정책 동향 /1
   나. 언론의 반응 /7
   다. 업계의 대응 /10
2. 향후 대중 통상 정책 전망 /12

Ⅱ. 중국의 대응 동향 및 전망 /16

1. 대응 동향 /16
   가. 정부의 인식과 대응 /16
   나. 언론의 동향 /23
   다. 기업의 동향 /23
2. 향후 중국의 대응 전망 /25

Ⅲ.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27

1. 미-중 통상 갈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7
2.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29
   가. 정부 차원의 대응 /29
   나. 기업의 대응 /31

Ⅰ.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 동향 및 전망

1.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 동향

가. 정부 및 의회의 정책 동향

□ 미국의 대중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업계 및 정가에서는 중국을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무역적자 누적 등 경제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음

○ 업계의 압력을 받아 미 상하 양원이 정부에 강력한 대 중국 무역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부시 행정부는 업계와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되도록 무마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업계와 의회에 압력을 수용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위앤화 평가 절상 압력

○ 부시 행정부의 국제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은 WTO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를 중심으로 한 쌍무 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위앤화의 고정 (달러 당 약 8.28위앤)을 해제시킴과 동시에 상당폭의 평가절상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회, 언론 및 업계의 수 많은 압력에도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한 협상형 식의 조용한 외교를 추구해 왔음
- 그러나 2004년 무역적자가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이러한 역조현상이 2005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최근 의회 및 업계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음

○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 미 정부(재무부)는 지난 5.1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중 강경책 구사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고, 재무부의 차기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 금년 10월까지 중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환율 조작국” 지목 자체는 양국간 관련 협의를 촉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미국의 환율조작국가 지정 관련 보고 개요]

□ 규범 및 제도

◦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의거, 美 재무부는 19988년 10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IMF의 협조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달러대비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동법안에 의거 재무부는 해당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관련 기준과 함께 지정내역을 의회에 보고함

- 동법은 ‘환율 조작’을 1) 실질적인 국제수지 조정 프로세스

를 억지하거나 2) 무역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환율을 왜곡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환율조작을 하는 것으로 지적된 국가가 1) 상당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2)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美 재무장관은 환율조작으로 인한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IMF를 통하거나 해당국과의 양자협상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 Title 22 U.S.C. 5305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Section 5304에 따른 해당국과의 협상결과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 미국과 EU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보다 유연한 외환거래시스템(상하이)을 도입하는 등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환율조작국가 지정 사례와 후속경과]

□ 지정 사례

지정시기	지정 국가
1988년 10월	한국, 대만
1989년 4월	한국, 대만
1989년 10월	한국
1992년 5월	대만, 중국
1992년 12월	대만, 중국
1993년 5월	중국

1993년 11월	중국
1994년 7월	중국

자료원: Report to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 on Clarification of Statutory Provisions Addressing Currency Manipulation (2005.3.11)

□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별 후속 경과

◦ 한국
- 1990.3: 기존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
- 도입시점의 시장평균환율제는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의 수급에 맡기되 그 일중 변동폭을 ±0.4%로 제한한 것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변경 끝에 최종적으로 10%까지 폭이 확대되었음

◦ 중국
- 1994.1 : 기존의 이중 환율제에서 단일 환율제로 변경
- 단일 환율제 변경에 따른 실제 절하율에 대한 미국과의 의견불일치로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음

◦ 대만
- 1989.4 : 관리변동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환율 자유화)로 변경
- 87년 1:31.85였던 달러:NTD 환율은 89년 환율 자유화 이후 1:26.41까지 절상되었으며 90년대 이후 대만기업의 급속한 해외진출은 환율 절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低위앤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추진

○ 2005.4.6일 미 상원 Charles Schumer(뉴욕, 민주당) 의원과 Lindsey Graham(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은 중국

정부가 특정 기간 안에 위앤화를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China Free Trade Bill)

- 같은 날 열린 상원 동의(Motion to Table) 표결에서 33대 67로 승리
-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최종 표결은 오는 7월 진행 될 예정

○ 2005.4.20: 미 상원 Charels Schumer 의원, Sander Levin(미시건, 민주당) 외 33인의 상하원 의원과 더불어 1974년 무역법 301조 a항 청원을 USTR에 제출, USTR이 중국의 위앤화 가치 조작 혐의를 WTO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USTR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미 하원 Duncan Hunter 의원 및 Tim Rayn 의원의 공동 발의로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China Currency Act' 상정

- 법안의 내용은 중국 위앤화가 달러화 대비 8.28위앤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에 비해 40% 이상 저평가 되어 있고 이것이 중국 수출기업에게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수출보조금은 WTO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대해 미국 통상법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섬유 세이프 가드 관련 조치

○ 경과

- 2004년말 통상법원이 CITA가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접수, 심사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의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린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관련 논란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05년 1분기 중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 실적이 발표되고 수출금액이 폭증세를 보임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요구가 다시 강하게 제기
- 4.27일 연방항소법원이 상기 임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CITA 등 정부기관이 세이프가드 발동업무 진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됨
- 5.13일 CITA는 중국산 의류 3개 품목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발동(대상품목 : 면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 면 바지/ 면 및 인조사 내의류)
- 5.18일 CITA는 중국산 4개 품목의 중국산 섬유, 의류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품목 : 인조사 니트 셔츠/ 인조사 바지/Combed 면 원사/ 남성.남아용 면 및 인조사 Woven 셔츠)

○ 향후 전망

- 상기 이외에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5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6월 중 발동될 것으로 예상

[7월 1일 이전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

- 기타 인조사 필라멘트 원단 (카테고리 620)
- 남성/남아용 울 바지 (카테고리 447)
- 니트 원단 (카테고리 222)
- 면 및 인조사 브래지어 (카테고리 349/649)
- 면 및 인조사 드레싱 가운 (카테고리 350/650)

- 최근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고 또한 미 의회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규제 요구가 강해지면서 미국의 섬유 관련 협회들의 세이프가드 청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

○ 미국은 국제무역량의 약 7%에 해당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미국의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될 전망임

○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재권 침해행위 감시 및 지재권 보호관련 중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 정부 직원을 중국에 파견, 상주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지재권 보호노력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됨

나. 언론의 반응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미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등이 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미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관련 조치를 매우 관심 있게 보도하고 해석을 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전반적 무역적자, 특히 대 중국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현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unsustainable) 중국과 미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를 옹호하거나, 중국의 위앤화 절상과 관련하여 국내산업을 옹호하는 특별한 방향으로 논조를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음

○ 미 언론은 중국 위앤화 절상 등의 움직임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수입규제 보다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바라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

○ 5월 19일자 사설(Tougher on China)을 통해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거나 달러화 페그를 포기할 것을 촉구

○ 단, 워싱턴포스트지는 현 부시 행정부나 의회가 취하는 조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섬세한 대 중국 정책을 주문

○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중국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정책의도와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

- 과거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가 오히려 일본산 자동차의 고부가가치화를 촉발하여 후일 미 자동차 산업에 더 큰 해악을 끼친 것과 같이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량 규제는 중국산 섬유의 고급화/고부가가치화를 초래하고 중국 섬유업체들의 고마진을 보장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중국 위앤화의 달러화 페그 자체를 통화가치 "조작"이라고 부르는 등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뉴욕 타임즈

○ 5월 21일자 사설(Yuan Diversion)을 통해 중국의 위앤화가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

○ 단, 뉴욕 타임즈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위안화 관련 대 중국 조치가 사실은 진정한 문제로부터 논점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

- 미국인들의 소비성향과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으로 미뤄 급격한 위앤화 절상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 진보적인 입장의 뉴욕 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적절한 보완정책(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 구제) 없이 자유무역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탓에 생긴 문제를 중국 위앤화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또한 동지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대중투자에 의해 창출되고 있음을 들어 양국간에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

다. 업계의 대응

□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이 제조한 것이고, 미 소매업계의 상당수가 중국에 거래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 범람에 대한 미 업계의 반응은 통일 된 것이 아님

□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

○ 미 제조업계의 상당수는 중국산 수입제품 범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NAM의 중국 통상관계에 대한 기본적 입장

- 중국은 WTO 무역 규범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으며, 고정환율제도(1불=8.28 위앤)를 통해 환율을 불공정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음
- NAM은 3-4년 전부터 중국이 40%에 달하는 위앤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 대 의회 로비를 주도

○ NAM은 5.17일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 관련 중국에 대한 경고 역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불만을 제기

□ 자동차 업계(ATPC 등)

○ 빅3의 판매율이 감소하는 반면 일본제품과 한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및 보복조치를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이들의 로비방향은 현재의 "환율조작"의 해석 폭을 확대하는 것과 조작국 피지정시의 현실적 보복조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음

□ 섬유제조업계(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 /National Textile Association)

○ 2005년 1월 1일 부로 WTO 섬유협정에 따라 섬유쿼타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미 섬유제조업계는 중국 섬유업계와의 직접적 경쟁에 노출

- 이에 따라 미 섬유업계는 최근 들어 일자리 감소, 공장 폐업 등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그 만큼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 및 대 의회 압박도 매우 적극적

□ 소매/수입업계(U.S.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s and Apparel 등)

○ 제조업계의 위와 같은 반응에 대해 미 소매업계 및 수입업계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 수입을 통해 미 소비자들의 복리(Social Welfare)가 향상됐음을 지적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섣부른 규제 조치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2. 향후 대중 통상 정책 전망

□ 현재 대중 통상 압력을 바라보는 시각

○ 최근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일각에서 대중 경고 및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의회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WTO 도하 라운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은 양자간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집중되었으나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호의적 태도를 버리고 있음
- 특히 현재 협상 완료된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이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 드라이브는 크게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며 최근 부시 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의회 달래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수 있음

○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앤화를 절상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 제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 경고는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

- 중국의 수출 구조 자체가 대부분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나 기술을 들여오는 가공 무역 형태기 때문에 위앤화 환율을 절상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미국의 대응

○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중국 수입품 범람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대중 적자 누적 등의 문제 등은 미국의 국제수지 및 경기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자체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워싱턴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급격하게 위앤화를 재조정하거나, 미국이 대중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경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은 미 상하원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달러화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비춰지고 있어 중국의 구체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지속될 것임

- 미 정부는 위앤화 평가절상관련 대중 압력행사에 대한 의회 및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상황을 고려, 전면적인 환율 자유화가 단시간 내에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간단계의 조치시행을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중간적인 조치로 위앤화 변동폭의 확대 및 현재 달러화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위앤화를 복수통화바스켓에 고정시키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은 상해에서 보다 유연한 외환거래 시스템을 도입, 여전히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했던 기준(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압력을 미-중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강력히 전개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공정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노동 및 환경기준을 WTO가 정한 기준으로 상향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며 정부 조직 및 각종 법규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확대될 것이나 발동품목의 범위는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여부 및 중국 정부의 수출관세 부과,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등 중국측의 대응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중국산 섬유 및 의류수입 규제조치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 섬유업계는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반덤핑 제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임.
- 한편, 미국 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중국산 섬유와 의류 수입을 성공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조치로 반덤핑 제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반덤핑 제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 섬유산업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반덤핑 청원에 참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지만 1년 단위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에 비해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음

○ 워싱턴 통상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의 향배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7월 중 실시될 Charles Schumer 제출 법안(China Free Trade Bill) 투표 결과
- 9월 중 추진될 미-중 정상회담
- 10월 중 발표될 하반기 재무부 교역상대국 환율관련 대의회 보고

Ⅱ. 중국의 대응 동향 및 전망

1. 대응 동향

가. 정부의 인식과 대응

1) 전반적 기조

□ 중국산 제품의 수출확대에 따라 중국은 전세계 최대 반덤핑 피소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와의 마찰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의 통상공세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의 통상공세가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장개방과 함께 환율시스템의 변경 등 경제 전반과 함께 정치적인 측면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중국정부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장질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여 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세를 보여 왔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이어 금년 섬유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최대 수출지역인 광동성의 경우 대외경제무역국과 세

관 공동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증가추세와 함께 덤핑제품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하여 수출제품에 대한 예비경보 시스템을 운영

- 현재 중국 관계당국은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제품에 대한 예비경보체제를 적용, 각 국가의 제품수요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중국산 가구, 신발 등 제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아 외국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에서도 악성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의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임

□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일련의 유화자세와 함께 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onomy Status) 획득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통상 압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상무부는 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2.11.1일부터 제정·시행중인 ''대외무역장벽조사잠정규칙''을 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새로 발표하고 2005.3.1일부터 시행

- 신규 규칙은 기존 규칙의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장벽에 대한 범위 확대, 일부 용어 및 문구의 법적 표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수정, 조문체계 정비 등 일부 내용을 수정

2) 이슈별 대응

□ 섬유쿼터 : 정치카드에서 경제카드로의 전환→적절 수준의 타협

○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이지만 최대의 경쟁국이기도하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중국과 대만간 양안(兩岸) 관계의 긴장이라는 정치 카드를 통해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왔음

○ 그러나, 최근 미국은 정치 카드보다는 경제 카드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인 것으로 평가됨

- 경제 카드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최근 중국산 면바지, 면셔츠, 속옷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활한 것을 꼽을 수 있으며 쿼터가 부활된 3개 품목은 미국 방직업체들이 요청한 품목이 아니고 부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품목이란 점이 주목됨

○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미국과 EU의 압력에 대해 맞대응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타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2가지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

-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앞으로 상당기간 일정 폭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국가경제 정책상의 필요성으로서, 중국은 향후 1~2년에 걸쳐 완만한 경기 연착륙을 반드시 유도해야만 디플레이션및 실업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출의 급락세는 매우 경계해야할 요소이며 對미·EU 맞대응 정책으로 나갈 경우 강도 높은 수입규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안을 계속 내놓으려고 할 것임

-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섬유쿼터가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산 섬유류의 급속한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중국의 섬유산업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과잉 투자와 최근의 면화가격 상승세로 업계 이윤 폭이 2~5%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제외하면 핵심경쟁력을 찾기 어려운 형편임
- 중장기적 섬유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인 중국은 언제까지나 가격위주의 경쟁력에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폭의 수출 섬유제품 가격인상은 용인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선진수입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최저 수출가격제도(floor price),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등 기존의 방식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면서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수출예비경보제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구사해나갈 것으로 보임

○ 6월 1일자로 발표된 78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폐지 조치는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분석됨

- 5월 20일의 수출관세 인상 발표 후 경량,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수출오더 자체를 받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쿼터 폐지를 대비해 설비증설을 한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등 업체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었음
- 현지 업계는 이번 수출관세 폐지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추가 인상 조치를 우려하는 실정임

< 중국의 수출관세 정책관련 주요 조치 >

주요조치	일자	조치 내용 및 배경
수출관세 부가 실시	05.4.12	▪ 2005.1.1부 수출관세 인상 조치 실시: 코트류, 스커트, 바지, 논-우븐 셔츠, 니트셔트, 잠옷, 내의 등 6 개품목군 148종 제품 대상 ▪ 0.2~0.5위앤 사이의 수출세 부과 ▪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산 수출급증에 따른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자구책 성격
수출관세 인상 발표	05.5.20	▪ 2005.6.1부 74종 제품 대상으로 평균 400%인상된 수출관세 부과 결정 ▪ 미국이 7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EU는 9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는 등 통상마찰에 심해지자 대응 필요성 제고
홍콩 원산지 품목 수출관세 면제발표	05.5.25	▪ 2005.6.1부 홍콩 방직업계 부담 경감 위해 중국 내에서 일부가 공 거친 후 홍콩산 제품으로 수출되는 제품 대상
수출관세 부과취소 발표	05.5.30	▪ 2005.6.1부 수출관세 부과대상 전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일시 중단 ▪ 중국 내 업계의 거친 반발 및 피해를 고려한 조처로 해석됨

□ 위앤화 환율 : 국제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비→기존 입장 고수

○ 중국은 미국과 EU로부터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르기 보다는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중국도 위앤화 환율제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밝혔듯이 결코 외부 압력에 굴복해 평가절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함

○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압력에 대해 다양한 논리 개발로 대응하는 한편, 위앤화 평가절상 시, 중국 경제에의 영향과 평가절상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중국 정부로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 금융가에서는 올 7월 또는 9월 중 평가절상 단행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평가절상 시기를 이미 정해놓았다는 어떤 결정적인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위앤화 평가절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2가지 요인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하려고 할 것임

- 첫 번째 요인은 부동산 과열 부분으로서 최근 상하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가열되면서 '상하이 경제의 부동산化'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음
- 그 동안2~3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향후 수개월 동안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추가로 내놓고 이 시기동안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후, 여전히 과열이 지속될 경우 평가절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음(과열이 진정될 경우, 평가절상 압력은 낮아짐)
-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 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핫머니의

동향으로서 중국은 부동산 투기 자금의 상당 금액이 핫머니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핫머니의 정확한 규모와 (만약 평가절상을 단행할 경우) 향후 핫머니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 섣불리 평가절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이상과 같은 요인은 중국에 있어 서방의 평가절상 압력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미국과 EU내에서도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반드시 미국과 EU에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중국이 절대수세에 몰린 상황만은 아님

□ 일반 수입규제 : 지속 가능성에 대비→적극적 대응 방침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서방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 대해 중국은 종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중국이 상무부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홍보활동에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반덤핑관련 법규를 중국어로 번역, 게재하고 있으며 반덤핑 피소를 당할 경우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기조를 이루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했으며 최근(2005년 3월) 이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보다 확대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보복 조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

나. 언론의 동향

□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

○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성상, 언론의 동향이 정부의 입장 및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섬유쿼터, 위앤화 환율, 외국의 무역장벽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임

□ 國益을 전제한 중국내 다양한 시각 반영

○ 최근 중국 언론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국익을 대전제로 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움직임임

- 위앤화 환율 문제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환율 변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전하고 있음

다. 기업의 동향

□ 대외환경 변화에 촉각

○ 이제까지 중국을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급부상시킨 요인

으로는저비용 구조의 적중, 생산효율의 지속적 향상, 민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급부상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우위요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중국 업계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

- 2004년 9월 16일 스페인 동남부 엘체 시에서 중국산 신발 컨테이너 16개 물량이 불 질러진 사건은 중국산 제품이 앞으로 엄청난'안티 차이나'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조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여전히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교역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험난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한 해에만 세계 각국에서 5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당해 이 분야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업계에 있음
- 이에 따라, 하이얼과 같은 중국 대표기업들은 종래 단순 수출방식을 벗어나 해외현지시장 직접 진출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외국기업 M&A도 포함되고 있음

□ 대내적 과잉구도에 긴장

○ 중국 기업들을 보다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은 대내적인 공급과잉구조임

- 중국은 2004년 하반기 600개 주요 상품의 공급과잉 비율이 74.3%에 달할 정도로 고질적인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시장은 물론, 중국시장에서도 치열한 가격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외부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때, 중국기업으로서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이나 단기간 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음

-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수출규제와 함께 품질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의 통상압력 가중은 중국기업들의 적자생존 환경을 가속화시켜 향후 대대적인 산업지도 재편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반덤핑 공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가수출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업구조 조정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2. 향후 중국의 대응 전망

□ 중국의 향후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사안별로 서로 다른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이 큼

○ 섬유류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 수입국과 맞대응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새로운 양보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섬유류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을 벗어나려 할 것임

○ 위앤화 환율 문제는, 선진국의 압력이 향후 보다 가중된다고 해도 굴복 또는 양보 조치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논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환율 조정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경우, 행동에 나설 전망임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세적인 자세를 벗

어나 적극적인 대응 방향으로 나가려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미국 또는 EU와의 정책적 타협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자국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카드를 지키는 대신 덜 중요한 카드는 양보하는 방향을 채택할 수도 있음

Ⅲ.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1. 미-중 통상 갈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측면

○ 한국의 對중국은 경제교류는 수출과 투자의 동행성이 강하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음

- 대중국 수출품의 상당수가 중국 내 가공 후 해외수출되고 있어 중국의 해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50%가 이미 중국에 와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상당량의 'Made in China'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 중국이 통상압력을 당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됨

○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병행도 가능

-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2003년 대비 2004년 적자 증가율이 50%를 상회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압력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2005년 1분기의 경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증가율이 15.9%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9위의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대중 통상 압력의 파장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임
- 이 경우,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시간 내에 특정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환율조작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정 대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간 원화가 상당 폭 절상되었다는 점, 중국에 대한 공세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환율 재조정 과정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위험성도 있음

○ 국제 환경이 단순 수출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으로 변화한 현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압력 강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의 분석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과제임

□ 긍정적 측면

○ 대중 통상압력 및 중국산 수입규제 조치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

-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수입관세 부과 등 중국 상품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강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요구의 이면에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위앤화 환율 고정, 악명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만연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압력 강화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세이프가드 발동이 시작되고 있는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마찬가지로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

과할 경우 중국산과 대미시장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상품의 수출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가. 정부 차원의 대응

□ 향후 6개월 간은 미-중 통상 관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유무역체제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중 통상관계 전개를 면밀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 정황상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타 경제권과의 압력에 직면한 중국 정부로써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점진적인 위앤화 환율 재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중 통상관계와 관련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 대비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	내용	기업 대응
최선	미-중 간 원만한 협의에 의한 중국 위앤화 절상에 의한 수출 연착륙	· 중국과의 경쟁압력 저하에 따른 중소업계의 비중국권에 대한 공격적 수출 마케팅이 요구됨
차선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	· 현행 기업 전략 유지하되 미국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최악	미-중 간 통상 분쟁 발생	· 전반적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고조 · 양대 시장에 대한 별도 수출 전략 마련 필요

□ 미래지향적 안목의 접근

○ 최근에는 중국의 대한국 통상압력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나 양국간 통상 규모를 감안할 때, 언제라도 민감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존함하므로 통상 현안이 발생한 후에 나서기 보다는 양국 관계의 문제점들을 평소에 체크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효과적인 대중국 통상 협력 및 통상 협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여러 기관들이 중국 정보를 중복적으로 취급하며 분석이 없는 단순 수집에 그치고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대중국 통상관계를 이끌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와 각종 사업을 전개해야 함

□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치밀한 준비

○ 집권 2기에 돌입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통상문제를 WTO 체제하의 다자간 협상과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FTA를 통해 한미 통상현안을 다룰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미국의 주요 대한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한미 주요 통상 이슈]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조치사항
- 규제개혁 : 입법예고 기간 과소 등
- 통신분야 강제 표준도입 시도
- 승용차 교역 불균형
- 제약분야 가격 산정 불합리
- 정부보조금 문제 (반도체, 제지업계 등)
- 스크린 쿼터 조정 문제
- 농업분야 현안 (오렌지 수입금지, 쌀 시장 개방정도, 쇠고기 시장 재개방, 조류독감 및 식품표준 등)

□ 위앤화 평가절상이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비

○ 조만간 위앤화 절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앤화 절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달러 및 기타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 대한 무역적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무역적자 증가율 (전년대비)은 무려 50%를 상회하는 등 미국의 역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통상압력이 가해질 전망임

나. 기업의 대응

□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적정 포트 폴리오 구성

○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둘러싼 국제통상마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중국을 단순 가공기지로 활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적극 전환해야 함

- 이는 중국이 WTO 가입 후 내수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내수 위주로 성장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정책적 전환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함

○ 보다 큰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잦은 시장이므로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 내수시장에 올인하기 보다는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리함

□ 브랜드 육성

○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다른 한편 으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압력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고급 브랜드 육성임

-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브랜드이며 중국에서 생산해 'Made in China'를 달고 해외에 수출된다고 해도 고유 브랜드가 있다면 중국산이라는 인식보다는 브랜드 효과를 보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통상마찰이 주로 저부가가치 범용제품과 대량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첨단기술 제품위주로 제품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요구됨

작 성 자

◈ 임채근 차장 (뉴욕 무역관)
◈ 박한진 차장 (상하이 무역관)
◈ 한정희 과장 (워싱톤 무역관)
◈ 정준규 과장 (베이징 무역관)
◈ 최원석 대리 (해외조사팀)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과 중국의 대응 ; 동향과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